

2. 日本 規制 緩和와 美日 通商 摩擦

- 최근 世界的 趨勢인 規制緩和論의 根源地는 美國이며, 미국은 일본에 대해 '미니 아메리카의인 日本'을 강요하는 논법을 定論化시키고 있음
- 問題는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가 美國으로부터의 通商 壓力에 의한 「臨機 應變式 措置」였다는 것임
- 형식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同調하는 수준에서 과감히 탈피한 일본 스스로의 自生的이고 體系的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

- 1993年 末 “新語・流行語 年例 컨테스트”에서 入賞한 「규제 완화」
 - 일본에는 현재 약 500개의 規制法이 있고, 認許可 項目은 1만 1천 件으로 GNP의 약 40%가 規制 産業에서 생산됨.(美國은 88년 기준으로 6.6%)
 - 86년 以後의 엔高 및 美國과의 무역 마찰 對應策으로 88년 12월 「規制 緩和 推進 要綱」이 발표되고, 이에 따라 體系的인 規制 緩和 措置가 추진되어 옴.
 - 한편 미국과의 「構造 調整 協議」에 규제 완화 항목이 포함되고, 일본側 약속 사항으로 합의된 개별 항목에 대한 實現 노력이 요구되어 왔음.
- ‘汎世界化’, ‘普遍化’로 둔갑하는 美國式 規制 緩和論
 - 무역장벽 제거의 측면만이 강조되어, 日本內 特殊 事情이 고려되지 않은 채 國際 制度(특히 미국에 準한)의 ‘均一化’를 위한 規制 緩和가 문제
 - (例1) 일본의 「行政指導」를 없애라는 요구와 行政指導로 외국인에 대한 일본 市場 占有率을 보장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의 모순
 - (例2) 獨占禁止法은 強化를 요구하면서 景品 規制에 대해서는 緩和를 주장하는 미국측 요구의 모순
 - 市場의 寡占 支配 防止를 위한 규제 완화가 새로운 寡占을 탄생시킴 (실제로 美國內 航空 市場 및 長距離 通信 市場은 규제 완화 정책으로 또다른 극단적인 寡占을 낳았음)
- 결론적으로 미국 國內 條件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통상 압력에 의거한 規制 緩和는 전면 再검토되어야 함.

(홍근철)